

한·미FTA를 조명하다

2006년 들어 미국, 인도 등 거대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중 미국과의 FTA는 정부가 스크린 쿼터제 축소에 합의하면서 협상을 본격 개시, 2008년 협정 발효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한·미 FTA의 추진배경과 현재 추진과정 및 앞으로의 과제 등을 살펴본다.

■ FTA 란

무역에 있어 관세 등 장벽을 허물고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을 말한다.

■ 한·미 FTA추진 배경

2005년 1월 들어 쌀 관세화 협상이 일단락되고, 부시 2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미 FTA 추진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스크린쿼터 등 문제로 진척을 보이지 못하다가 2006년 정부가 스크린쿼터 축소에 합의하면서, 한·미 FTA 추진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지난 2월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을 본격 개시를 선언했다.

□ 미국측의 FTA 협상 개시 조건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 스크린쿼터 축소
-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 적용 유예
- 의약품 약가 산정 기준 개선

■ 한·미 FTA 체결의 효과

□ 경제적 효과

미국은 전 세계 GDP의 29%, 수입의 16%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수출시장이자 최대 경제권으로서 FTA 체결로 한·미 양국간 교역이 확대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높아지고 무역도 신장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기대다. (연간 경제성장률을 2% 추가 예상)

한국무역협회,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계는 한·미 FTA 발효로 4인 가족 기준 가구당 소득이 약110만원 증가하며, 10만명 이상 고용이 증대되고,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318억달러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기업, 그 중에서도 금융기관들의 한국 진출이 증가하게 되면 동북아 금융 및 물류 중심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정부와 연구기관의 예측이다.

정부는 이 같은 한·미간 무역 자유화는 국내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정치, 외교 안보적 효과

전문가들은 부시행정부가 FTA와 같은 경제동맹을 정치, 안보영역 협력으로 확대 해석하는 성향이 있다고 본다. 미국 행정부는 한·미 FTA 체결이 미국 의회 내에서 한국에 대한 우호적 시각을 형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한·미 안보동맹을 더욱 강화, 성숙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 요르단 등과의 중동문제도 FTA를 통해 해결해 보려는 시도를 보인 바 있다.

미국은 한·미 FTA추진으로 중국, 일본 등 한국 주변국과의 관계정립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FTA 문제는 없다

한국은 현재 미국보다 여러 분야에 있어서 취약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FTA로 인한 관세와 각종 비관세 장벽이 철폐될 경우 충분한 경쟁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시장이 경쟁력 있는 외국 기업, 자본에 의해 짧은 시간 안에 장악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많다.

■ 한·미 FTA 분야별 쟁점

농업분야, 지적재산권 및 서비스 산업 분야 등도 쟁점 분야로 남아있다.

가장 큰 장애물로 떠오르고 있는 농업분야의 경우, 예외인정이나 농업부문만 따로 협상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제조업

구분	협상쟁점
자동차	한국, 완전 무관세 요구하나 미국 자동차 업계 반발
전자	무관세 이견 없음
섬유	무관세 이견 없음

□ 농업

곡물류, 육류 관세 인하폭이 협상의 쟁점이 되고 있다. 정부는 80% 정도의 농산물에 대해 관세를 인하할 방침이다. 농업분야 개방으로 미국산 수입량이 189% 증가하는 반면, 국내 생산은 약 2조 8백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농민단체 등은 한·미 FTA로 인해 미국의 값싼 농산물이 대량 수입되어 소득 급감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비교우위분야를 중심으로 개편되

어 경쟁력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

□ 서비스업

교육, 의료, 법률 등 서비스업 시장 개방과 관련, 미국은 전면적인 개방을 우리 측에 요구하고 있다. 서비스 시장개방이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지만 성숙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약 28만 8천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된다는 분석도 있다.

■ 한국의 FTA 구상

한국은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과의 FTA 협상이 이후 일본과 중국 등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의 허브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상국	체결시점
칠레	2003. 2
싱가포르	2005. 8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2005. 12
동남아국가연합(ASEAN) 인도,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	협상 중 또는 협상잠정중단

[참고] 한·미 FTA가 우리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핵심쟁점

월스트리트로 대변되는 세계 최강의 금융대국 미국과의 FTA 체결이 우리 금융시장에 끼칠 영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간 한국은 지사나 자회사 형태로 국내에 실물 투자함을 전제로 외국금융회사들의 국내 금융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허용, 투자를 받아들였다.

한·미 FTA가 진행되면 미국 측은 이러한 상업적 규제 없이 인터넷 등 가상공간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측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내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금융서비스를 개방할 것을 요청, 이를 개방할 경우 관련 법체제나 감독체계 미비로 민원발생시 소비자를 보호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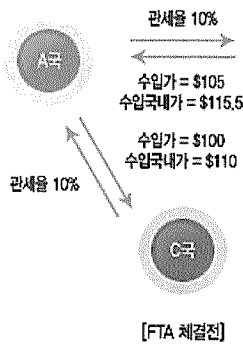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소비자들의 불이익도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 유수의 금융기관들이 한국에 많이 진출할 경우, 아시아 지역본부로 한국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어 동북아의 새로운 금융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참여정부의 '동북아 금융 및 물류중심지 전략'과도 맥을 같이 한다.

■ FTA로 인한 이익과 손실

FTA의 회원국, 역외국, 전 세계 경제에 대한 효과를 각각 살펴보면 회원국에는 긍정적이나 역외국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전 세계에 대한 영향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는 크게 정태적 효과와 동태적 효과로 나누어지며 정태적 효과는 다시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로 나누어서 설명될 수 있다.



협정인 반면 역외국에게는 '차별무역협정' 이라고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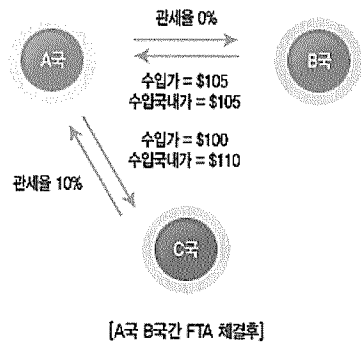
위 그림에서 보드시피 A국은 B국과 FTA를 체결하기 이전에는 가격이 더 저렴한 C국의 상품을 수입하지만 B국과 FTA를 체결한 후에는 양국간에 무관세가 적용되어 C국의 상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있는 B국의 상품을 수입하게 된다.

따라서 A국은 C국에서 B국으로 수입선을 변화시키며 이는 곧 역외국인 C국이 FTA체결로 인해 A국이라는 수출선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동태적 효과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나타나는 효과를 말한다.

FTA 를 체결하면 기본적으로 역내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수 있다.

또한 기업들간의 경쟁이 촉진되고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하여 역내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무역창출효과'는 관세가 철폐되어 수입품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국산품이 가격이 낮은 수입품으로 대체되면서 소비와 생산이 증가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역전환효과'는 FTA 체결 이후 수입선을 역외국에서 FTA 체결국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FTA는 역내국에는 특혜무역

FTA 를 체결하면 소비자가 비싼 국내 생산품 대신 가격이 싼 수입품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경제 생활에 도움이 된다. 기업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해외 원자재 및 부품을 값싸게 조달하고 외국자본을 유치하며 선진 기술을 이전 받을 수 있게 되는 이익이 있다.

국내 생산기업의 경우도 FTA 체결국으로부터

원자재 또는 부품을 수입하여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원가절감으로 인해 가격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한편 FTA 체결국으로부터 국내 생산품보다 가격이 싼 완제품이 수입될 경우에는 국내 생산기업에 타격이 있을 수 있으나 오히려 기업간의 경쟁을 통해 기술향상 및 품질 제고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1)FTA의 이익

가. 경제적인 측면

a. 정태적 효과

일명 '단기 효과'로도 불리는데, 이는 주로 관세철폐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이에 대한 이론은 Viner(1950)의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와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가 가장 많이 인용된다.

무역창출효과는 협정체결 전에 소비하던 고가의 국산제품이 상대적으로 저가의 효율적인 역내산 수입으로 대체되는 것을 말한다. 반면, 무역전환효과는 체약국간 관세철폐가 가져오는 교역상의 왜곡을 의미하는데, 관세철폐 이전에 보다 효율적인 생산구조를 가진 역외교역국이 존재하고 있었다면 특혜적인 관세철폐로 역외저가상품의 수입이 역내산으로 대체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효과에 대한 설명은 다른 분이 잘 설명하여 주신 것으로 생각된다. 기억해 두실 것은 FTA로 인한 관세철폐가 교역국의 수출입에 이 2가지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게 되며 무역창출효과 < 무역전환효과일 경우는 후생이 하락할 수 있다는 근거이다.

한·미 FTA를 예로 들어보겠다. 한국의 평균관세율은 11.2%, 미국의 평균관세율은 3.7%이다. 따라서 서로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다면 미국산은 11.2% 싸지고 한국산은 3.7% 싸질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 사람이 포드 자동차를 한대 더 산다면 이는 무역창출효과이다. 하지만 호주로부터 수입하던 쇠고기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된다면 이는 무역전환효과이다.

최근 한·미 FTA시 무역수지 효과에 대한 논의가 많다. 실제 FTA 효과를 분석하면서 무역수지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 교역이 증가하는 자체가 경제성장과 후생에 기여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이득이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수출보다 수입을 더 많이 한다고 하면 손해 보는 장사 아니냐는 얘기를 한다. 물론 중상주의적 논리이지만 이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적 분석은 가격인하가 소비증가에 미치는 탄력성에 기초한다. 따라서 가격인하가 클수록 소비증가량이 큰 결론에 도달한다. 한미간 관세율에 차이가 있는 만큼 한국은 수출보다 수입을 많이 하게 된다는 분석이 나오게 된다. KIEP는 현재 대미흑자 107억불에서 51억불 줄어 56억불 흑자를 보일 것으로 분석한다.

경제적으로는 이러한 논의가 맞다. 하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 우리가 수입하는 총금액은 2,500억불 수준이지만, 미국이 수입하는 총금액은 1조7천억불로 우리의 6배가 넘는다. FTA로 미국이 우리시장에서 가격이 11% 싸지고 점유율이 3% 오르고 우리는 미국시장에서 가격이 3.7% 싸지고 점유율이 1% 오르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미국에 비해 2배 이상 수출을 많이 하게 된다. 실제로 미국과 FTA를 체결한 칠레, 멕시코, 이스라엘 등은 엄청난 대미수지 개선효과를 경험한 바 있다.

b. 동태적 효과

동태적 효과라 함은 경제통합으로 인한 효과가 단기간 내에는 가시화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나타나는 효과인데, 규모의 경제, 경쟁촉진 요인, 외국인직접투자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최근의 FTA가 관세

철폐를 주요 내용으로 하던 전통적인 FTA 개념에서 크게 확장되어 서비스, 투자, 경쟁, 환경, 노동 등 전 분야에 걸쳐 포괄적으로 규정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FTA 효과분석에 동태적 효과가 매우 중요시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3월 KIEP에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다시 발표하면서 생산성 증대 1%를 가정할 경우 GDP 증가 7.75%로 전망하였다. 이때의 생산성 증대는 동태적 효과를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보면 궁색하기 그지 없다. 생산성 증대 1%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이해가 안된다. 이는 그만큼 동태적 효과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c. 개인적 의견: consolidating reforms or liberalization

무역전환효과나 무역전환효과나 하는 것은 이론적인 분석이다. 실제로 세계 통상정책 전문가들은 FTA로 인한 가장 큰 효과는 시장개방과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활동이 증가하고 외국인 투자유입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경제가 성장하고 고용이 창출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는 경험적으로 여실히 증명되었다.

우리가 가끔씩 강소국으로 언급하는 싱가포르, 네덜란드, 벨기에 등도 적극적인 개방으로 경제시스템을 개선하여 크게 성공하였다. WTO나 World Bank의 보고서들도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국가들의 소득이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크게 높다는 점을 증명해 주고 있다.

결국 FTA로 인해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익은 FTA로 인한 개방을 계기로 우리 경제시스템을 시장 친화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데 있다. 효율적이라는 말은 농사짓는 일자리가 하나 줄어드는 대신 잘 나가는 삼성전자에 일자리가 2개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FTA를 추진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취지에 있다.

나. 정치외교적인 측면

FTA 체결국간에는 비상사태나 자연재해 발생 시 공식적인 협력 체제를 통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국제적인 지원이나 협력이 필요한 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994년 12월 멕시코의 제2차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클린턴 미 대통령은 동년 1월부터 발효 중이던 NAFTA의 성공적인 정착과 FTAA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여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환안정기금 200억불을 멕시코에 긴급 지원함으로써 멕시코의 외환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었다.

최근의 한·미FTA도 한·미간의 동맹관계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최근 들어 한·미동맹은 균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북핵문제, 전략적 유연성 등을 둘러싼 한·미간의 갈등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이 FTA를 구애해 온 일본 등 다른 수많은 나라들을 제치고 한국을 최우선적으로 선택한 것은 이러한 한·미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두 나라간의 관계를 경제적 관계 강화를 통해 공공히 하려는 의도가 배어 있다. 한국의 이해관계도 동일하다. 한반도의 특수성, 북핵문제 해결 필요성, 미군의 안보적 비중 등을 고려할 때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훼손되거나 약화되는 것은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미국과의 FTA는 한·미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외교적 카드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2) FTA로 인한 손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FTA로 인한 이익이 막대하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할까?

앞의 설명이 국제무역론의 한 축인 자유무역론에 근거한다면 아래의 설명은 보호무역론과 현실적 설명에 기초한다.

가. FTA의 소득분배적 효과: 비교열위 산업에서의 생산 및 고용 감소

FTA는 가격구조를 변화시키고 생산체계에도 변동을 가져오게 된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득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느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가에 따라 득이 되기도 실이 되기도 한다. 수입이 증가하고 생산이 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서는 반대를 하게 된다. 근데 왜 해당분야 종사자와 정부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할까?

나. FTA와 유치산업보호론: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 저해?

리스트의 유치산업보호론은 보호무역론자들의 이론적 근거로 종종 인용된다. 특정분야가 아직 유아단계에 있을 때는 정부가 보호해 주어야 나중에 커서 경쟁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한국과 미국의 산업발전단계가 너무 차이가 나는 분야에서 개방을 좀 늦춰야 되지 않느냐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론적 논거이다.

하지만, 이 이론은 애석하게도 전혀 현실과 맞지 않다. 많은 학자들이 그 뒤에 수입 대체국들이 오히려 침체되고 수출지향국이 크게 성장하는 현상을 증명해 보였다. 우리의 경험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96년 유통시장 개방한다고 난리했지만 지금 와서 이마트, 삼성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국내브랜드가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되었고 월마트, 까르푸 등은 힘을 못쓰고 있다.

영화시장에서도 86년 배급시장 개방으로 극장에 X뿌리고 난리 했지만 지금은 경쟁력 있는 우리 배급사가 출현하는 계기가 되었고 배급시장의 3위까지 우리 업체가 석권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R&D인데, 첨단산업에 대한 R&D 지원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전혀 구애됨이 없이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방에는 부정적이면서 R&D에는 인색한 형편이다.

다. FTA와 양극화 심화

멕시코의 사례를 들어, FTA의 체결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환경과 노동조건이 악화된 점을 지적하면서 FTA 체결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FTA 체결의 전반적인 평가보다는 주로 특정 사회적 이슈만을 부각시킨 것으로 정확한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 만약 멕시코가 협정체결로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였다면 멕시코 정부는 FTA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FTA는 오히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마련과 고용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경제 전체가 침체된다면 누가 더 손해를 보겠다. 기업을 고용을 줄이면 되지만 서민은 생계를 꾸려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경제가 호황이면 식당에도 자주 가고 여행도 가고 가게 하시는 분들도 장사하기 좋아질 것이다. 그러려면 세금도 더 많이 내고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 FTA와 경제종속

미국, 일본 등 큰 나라들과 FTA 논의 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이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은데 한·미 FTA로 더 높아지면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조금 더 이론적으로 발전시켜 보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무역관계에 대한 종속이론이나 프레비쉬 보고서와 유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선진국 자본과 기술력으로 개도국의 노동을 착취한다는 내용이다.

마. 중심국과 주변국

Wonnacott 이 주장한 건데, 경제적으로 소국에 해당하는 나라와 대국에 해당하는 나라가 지역무역협정을 맺을 경우 일종의 중심국과 주변국(hub and spoke)의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경제적 소국은 경제적 대국의 무역협정 추

구전략에 휩쓸려 주변국의 형태로 머무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별로 현실적인 설명력은 없다.

■ 한·미 FTA 협상, 제대로 하라

정부가 전격적으로 한·미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정부의 협상 추진 절차에 대한 비판이 가중되고 협상 태도를 둘러싼 저항적 갈등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보수언론들도 사안의 가공할 파괴력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판단은 외면한 채 이분법적 편 가르기에만 여념이 없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건대, 한·미 FTA 문제는 본질은 친노냐, 반노냐 또는 나아가서 개방이냐, 개방 반대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국민의 삶의 패러다임과 우리 경제 문화 교육 의료 법률 등 모든 부문의 틀이 미국의 이해에 맞춰 바뀌느냐, 아니냐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비슷한 성격의 WTO 다자간 협상, DDA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불쑥 한·미 FTA를 추진하겠다는 노무현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동기가 무엇인지부터 뚜렷하게 밝혀야 한다.

✧ 국민적 손익 명백히 밝히길

정부는 지난해까지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어 있던 한·미 FTA를 갑자기 앞당겨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공청회가 파행으로 무산된 당일, 협상개시를 선언했다. 또한 각계의 의견수렴도 없이 스크린쿼터 축소, 쇠고기 수입재개, 자동차배출가스 기준완화, 수입 의약품값 인하 중단 등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을 협상도 해보지 않고 미리 양보했다.

한·미 FTA가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과 조사 연구도 미흡하다. 대외경제연구원이나 그나마 발표했던 분석 자료는 한 달 만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4~5배나 부풀려 다시 발표하였다. 무역흑자 축소와 대량실업 발생 효과

등에 대해서는 수정발표 과정에서 삭제되었다.

무역수지 전망 등 긍정적 효과추정 발표 자체가 상부의 지시로 은혜·조작됐다는 의혹마저 있다. 이외에도 한·미 FTA추진과정에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여론수렴 과정은 생략되고 주요자료는 철저히 통제되어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공론화가 저지되고 있다.

미국 TPA 일정에 맞추어 내년 3월까지 타결을 서두르는 '졸속협상·밀어부치기'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는 무언가에 쫓기는 듯하여 국민적 불신과 의혹을 심화시키고 있다. 대통령이 '국내 이해단체의 저항 때문에 한·미 FTA가 중단되는 일은 없다'고 호언장담하는 배경도 납득이 잘 안된다. 한 연구기관의 여론조사결과 국민의 75.6%를 반대하는 것은 절차상의 정당성 결여와 협상 전 양보 그리고 협상에 따른 손익계산서의 불투명성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노무현대통령과 통상협상 책임자는 국민들에게 한·미 FTA타결에 따른 국가적 손실과 이익을 명백히 밝혀 주길 바란다.

✧ 통상 절차법 제정 서둘러야

정부가 졸속협상·밀실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와 같은 국가적 중대사에 대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권한과 역할이 무시되고 협상과정에 있어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장치조차 없어 한·미 FTA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통상교섭의 절차, 기구는 민간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및 협의체제가 부재하고 이렇다할 국회의 사전, 사후의 동의절차도 없다. 영국 대표간의 합의 서명 후 국회비준만 받으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모든 협상권한은 외교통상부 산하의 통상교섭본부에 집중되어 있어 설사 협상을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일단 서명이 끝났으므로 국회가 비준을 하지 않으면 국가 신인도를 추락시켰다고 비난받고, 비준을 해주면 그 잘못된 협상안

에 대하여 국회가 욕을 먹는다.

따라서 진정 국익을 위한 통상협상을 하려한다면 통상교섭과 관련한 국회의 권한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고, 행정부 내에서도 협상권한을 상당부분 해당부처로 분산하는 조직과 역할의 개편이 필요하다. 최소한 국무총리 산하의 통상위원회 구성과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보장 및 국회의 사전·사후동의 절차를 골자로 하는 '통상절차법'의 입법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에 주어진 정부의 감독, 통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이해관계의 조정을 통해 사전 피해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한·미 FTA에서 반드시 얻어내야 할 것과 최후까지 마지노선으로 지켜야 할 것을 협상개시 전에 대내외에 공표하고 협상도중이라도 이를 지켜내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협상의 지속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한·미 FTA의 상대국인 미국은 협상개시에 앞서 국회의 승인을 얻고 국회가 정해진 기준안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관련기관마다 사전에 충분한 조사연구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자국밀실행정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정 생략, 최소한의 국회간섭 등이 되어 있지 않다.

✖ 지켜야 할 마지노선 공표를

지금이라도 정부는 한·미 FTA에서 우리가 요구해야 할 것과 협상과정에서 끝까지 견지해야 할 마지노선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는 FTA에서 요구사항과 지켜야 할 사항을 분명히 밝히는 것은 협상력을 높이고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조치다.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하여 '현저히 국민이 균형을 이루지 않고 불리해지는 상황에서 협상을 타결할 수는 없다' 식의 추상적인 답변은 소용이 없다. 국민들은 최소 남미 경제공동체와 스위

스가 미국과의 FTA 추진을 포기 또는 결렬할 때 미리 제시하였던 수준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요구조건과 마지노선을 알고 싶어 한다.

정부는 한·미 FTA에서 우리가 요구할 것, 그리고 끝까지 지켜낼 마지노선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상대국이 우리 측의 최소한원 요구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스위스, 남미경제공동체의 사례에서 보듯 협상중이라도 과감히 한·미 FTA 추진을 포기해야 한다.

■ 한·미 FTA 저지 대규모 도심 집회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4월15일 한·미 FTA 협상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처음 열렸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내세우는 반대의유는 크게 2가지이다.

미 행정부의 신속협상 권한이 소멸되기 이전인 내년 3월에 맞춰 너무 성급하게 FTA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광범위한 의견과 토론이 배제되고 결국 졸속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한 제2의 개항이라 불리는 한·미 FTA가 폐해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